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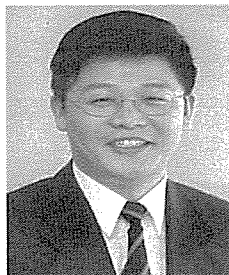
# 과학기술 대중화를 앞당기는 길

미국 물리학회에서는 한때 과학기술의 대중화문제를 가지고 세미나가 개최된 적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이런 문제가 제기됐는가를 보면 우선 과학기술분야의 필요한 자원을 할당함에 있어서 납세자인 국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하나고 또 재정할당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이 대개는 과학기술에 문외한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이유다.

이런 배경에서도 암시되었지만 당연히 이 세미나에서는 과학기술 대중화의 주요 수단으로서 언론문제 역시 논의됐다. 사실 언론은 과학기술 대중화의 주요 수단의 하나다. 하지만 이 단계에 이르기에는 만만치 않은 장애요인이 존재한다.

과학기술이 언론을 통해 대중화되는 단계를 생각해 보면 이 장애요인이 무엇인지를 쉽게 알 수가 있다. 우선 과학기술에 대해 가장 많이 안다고 볼 수 있는 과학기술자들의 언어 구사능력이다. 즉 과학기술자와 일반인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지식을 어떻게 대중이 소화할 수 있는 언어로 최대한 풀어내주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풀어낸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보도될 가능성을 생각해



安鉉實  
(한국경제신문 전문위원)

보야 한다. 즉 뉴스의 경쟁력이다. 사실 언론으로서 과학기술 뉴스를 정치, 경제, 기업 관련 뉴스와의 경쟁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 언론에서 취급됐다고 하더라도 대중의 반응이 문제다. 얼마나 주의를 끌 것이며, 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즉 독자의 가독성이나 열독률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다.

## 언론활용이 주요과제

이렇게 본다면 과학기술의 대중화 수단으로서 언론의 활용이 중요시되는 만큼이나 정작 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만만치 않은 난관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 벽을 어떻게 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물론 선진국의 경우 이런 장애요인을 어느 정도 극복했기에 과학기술의 대중화가 상당히 진전돼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후진국의 경우 이런 장애요인은 여전히 과학기술의 대중화를 크게 가로막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과학기술 대중화의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몇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가 최근에 일어나고 있어 주목된다. 우선 기술발전 조류가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계층을 확대시키고 있다. 정보기술이나 생명공학기술, 그리고 환경기술 등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술발전에 대중이 바로 노출돼 있는 것이다. 즉 기술적 성과에 대해 피부로 느끼고 기대를 갖는 일이 많아졌다는 얘기다. 앞으로 사회복지분야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증대할수록 이런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종종 논쟁에 휘말리게 되는 일이 빈번해진다는 것도 큰 변화다. 국방이나 안보 그리고 산업 경쟁력이 강조되던 시절과는 다르게 생명공학처럼 사회적, 윤리적 문제가 이슈가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이제는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하는 평가(evaluation)가 아

언론은 과학기술 대중화의 주요 수단이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 과학이 대중화되는 단계에서 장애요인으로는

과학기술자들의 언어구사 능력과 뉴스의 경쟁력 그리고 일반대중의 반응 등을 들 수 있다.

앞으로 언론은 기자의 전문성을 높여가면서 충돌하는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지에 대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과학기술자도 언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과학기술 대중화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나라 사회적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평가(assessment)가 중요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 정책이 과거와 달리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로 등장하면서 시민단체까지 고려하는 조정과 합의가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 뿐이 아니다. 기업층에서의 변화도 주목된다. 과학기술적 성과가 나오면 이제는 자금조달이나 기업의 시장 가치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이 IR(투자가 홍보) 차원에서 언론의 전략적 활용을 강화하고 있다.

언론계 역시 서로간에 경쟁이 가열되다 보니 신영역 개척에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역시 어떻게 분석, 가공해서 이를 대중에 알림으로써 수요기반을 확대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과학기술 대중화 관점에서 보면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 '과학기술의 대중화'와 '과학기술의 기반강화'라는 선순환의 가능성이 일단 엿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나 언론의 접근을 보면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다.

우선 정부의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을 보자. 11대 주요과제중의 하나인 과학기술 하부구조 구축의 일환으로 제시돼 있는 '국민 이해' 부분의 내용을 보면 과학기술의 소외의식, 피해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단지 과학기술에 대한 우호적인 지지층을 보다 확대하자라는 것일 뿐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전략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과학기술의 대중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다.

### 전문위원 등 도입 접근시도

언론 역시 아직은 과학기술을 어떻게 담아 낼 것인가를 두고 고심하는 단계에 불과하다. 물론 최근에 일부 종합지나 경제지의 경우 '전문위원'이나 '전문기자제' 도입 등을 통해 과학기술에 보다 가까이 접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과 분야의 다양성을 감안해 보면 아직은 언론만의 노력으로 대중화를 촉진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분명하다는 생각이다.

결국 우리의 경우 과학기술계의 보다 적극적인 대중화 노력과 이를 토대로 언론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긴

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셈이다.

그런데 긴요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서로간에 충돌하는 가치들을 어느 선에서 조화시키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가 있다. 성균관대 이효성교수는 몇년 전에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연구한 바가 있다.

그의 연구를 토대로 해 살펴보면,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논픽션과 픽션의 조화다. 저널리즘의 객관성이나 과학기술계가 중시하는 정확성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픽션이 대중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언론의 경우는 다소 객관성을 양보하더라도 독자층을 겨냥해야 하는 동기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문제는 공급원이다. 픽션이라 해도 여전히 전문성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확성을 두고 충돌하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도 중요하다. 흔히들 과학기술 관련 기사가 나가게 되면 과학기술자들이 제기하는 불만들이 있다. 그 예를 보면 "제목부터가 사실을 오도했다"거나 "정작 중요한 정보는 다루지 않았다"거나 또는 "사실을 아예 잘못 표현했다" 등이다. 하지만 이 문제의 원인을 따져 보면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

여기에는 과학기술계와 언론간에는 접근방식상의 차이도 한 몫하는 것 같다. 과학기술계는 흔히들 연구논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언론 입장에서 보면 대개가 결론, 본론, 서론이라는 역순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이 기본적인 차이가 의외로 상호간에 불신을 불러오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과학기술계가 전문화된 내용을 얼마만큼 일상어로 최대한 풀어 주었느냐는 것이 문제일 수도 있다. 즉 보다 대중적인 용어로 녹여 내는 능력을 오로지 기자에게 넘겨버리는 것부터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또 보다 명시적이거나 보다 많은 비유를 사용하거나 짧은 단어와 문장을 사용한다거나 응용의 사례를 재미있게 설명해 줬더라면 문제의 소지가 줄어들 수도 있다.

### 과학기술자도 언론활용을

물론 언론의 선정성은 항상 문제가 된다. 즉 정확성을 중시하면서도 독자를 염두에 두는 언론으로서의 과장되거나 자극적으로 호를 위협을 감수하는 경향이 많은 것이다. 결국 이렇게 충돌하는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문제다. 이외에도 과학기술계에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초연성 문제도 언론과는 충돌하는 가치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물론 언론은 기자의 전문성을 높여가면서 충돌하는 가치를 조화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이 보다는 과학기술계에서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우선 과학기술자가 언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어쩌면 이것이 더 빠른 길일 수도 있다. 언론과 기자들의 속성을 오히려 이용할 정도로 기자들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물론 모든 과학기술자가 이런 능력을 갖출 수는 없다. 미국의 경우 대학이나 병원 그리고 연구소에 전문 홍보 요원이 있어서 언론에 대한 중계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가 됐다는 생각이다.

또한 언론이든 과학기술계든 서로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인프라도 필요하다고 본다. 미국만 해도 과학저널리즘에 대한 프로그램과 학위과정을 설치한 대학이 다수 있다고 한다. 만약 이런 인프라가 있다면 과학기술자의 대중 접근능력과 언론계의 과학기술 전문기자 제도입 활성화에 힘을 불어 넣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도 과학기술 대중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영국은 한때 과학기술의 국제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는 지금의 COPUS라는 과학기술 전담기구를 설립했다. 과학기술과 언론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언론인에 대한 것 뿐 아니라 언론을 매개로 해 정치인들과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과학포럼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이와 더불어 과학기술 정책연구를 담당하는 STEPI(과학기술정책연구원)

와 같은 연구기관의 역할이 과학기술의 대중화 차원에서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각종 과학기술분야 정책연구 결과를 거시경제, 무역, 통상, 산업측면에서의 각종 이슈와 연결해 직·간접적인 정책결정자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노력을 해줘야 한다.

또한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투자가 미흡할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를 예측해 주는 연구들도 필요하다. 과학기술 정책 연구결과는 과학기술부문에 전체에 대한 자원배분은 물론 과학기술의 대중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는 특히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계는 대통령의 관심이 절대적이라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것은 고립주의에서 비롯되는 패배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이 보다는 과학기술이 다른 분야에 대한 투자와 경쟁관계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그런 인정을 토대로 과학기술이 우리의 경제성장과 삶의 질에 결정적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해 나가야 한다. 이제는 과학기술계의 보다 세련된 로비도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볼 때, 미국의 AAAS(미국과학진흥협회)의 연례행사처럼 과학기술자 전체가 모여 정부의 과학기술 예산 규모와 내용을 낱낱이 분석해 따져 보고, 국회와 정부를 향해 새로운 이슈를 던지기도 하며, 또 국가 차원에서 새로운 과제를 모색해 보는 노력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어쩌면 이런 자체적 노력이야말로 과학기술의 대중화를 앞당기는 가장 기본적인 접근자세라고 말할 수 있겠다. ①7